

내부 참고자료

최근 북한 변화동향

2004. 12

통 일 부

목 차

1. 개 관

가. 변화의 동인

나. 주요내용

다. 변화의 방향성

2. 분야별 변화동향

가. 경제분야

나. 사회·문화분야

다. 정치·군사·외교분야

3. 평가 및 전망

1. 개 관

가. 변화의 동인

○ 북한은 '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, 자연재해, 김일성 사망 등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기 시작

- 특히 '98.9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 통치로 체제 유지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, 심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생존전략 차원의 변화 모색

- 산업 및 농업 생산 저조, 장마당·암거래·밀수 등 불법 또는 비공식 부문의 급성장 등으로 계획경제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

※ '90~'98년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기록

○ 또한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및 교류협력 필요성 등이 북한의 변화를 추동

※ '00.6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이 실용주의적 정책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성에 기여

나. 주요내용

○ '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에는 실리를 내세우면서 부분적·점진적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

- '96년 이후 새로운 분조관리제('96), 독립채산제('97), 헌법개정('98) 및 20여개 경제관련법 제정을 통한 개인경제활동영역 확대, 두차례의 공장·기업소 통폐합('00년 1월·9월), 기업소간 물자교류시장 허용('02.2) 등

○ '02년 「7.1조치」를 통해 종전의 부분적 경제관리부문의 개선조치와는 달리 '경제전반에 걸친 개혁'을 실시

- △물가·임금·환율 등 가격기구 대폭조정을 통한 가격체계 현실화 (물가·임금을 각각 평균 25배·18배 인상)△기업의 자율권 확대, 인센티브제 도입 등 생산성 제고 조치△배급제 단계적 폐지, 공공요금 인상 등 사회보장 축소 등

- 이와 함께 신의주특별행정구('02.9), 금강산관광지구('02.10), 개성공업지구('02.11) 특구 지정 등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에도 적극적

○ 7.1조치 이후에도 경제관리부문에서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 시행

- '03.3 종합시장 개설, 가격상한 설정 및 제한적 변동가격제 실시, 주민들의 여유자금 동원 및 물가조절을 위해 '03.5 인민생활공채 판매 등

※ 그동안 시장기능 및 공채발행 등은 자본주의적 요소라면서 부정적 시각 견지

- '03.6부터는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스스로 그동안 기피해왔던 「개혁」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('03.6, 조선중앙통신·조선신보)

※ “종합시장 창설이 보여주듯이 대담하고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조선의 「경제개혁」의 특징”(‘03.6.16, 조선신보)

○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아직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,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

- 북한은 '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'는 명분 아래 경제사업에서의 '실리보장'을 중시하는 「실리사회주의」 추진

※ 실리사회주의란 "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시행하는 것"(경제연구, '03년 1호), 실용주의 개혁·개방을 추진 하였던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'실리사회주의'는 '70년대말~'80년대초 개혁·개방 초기 등소평의 흑묘백묘론(黑描白描論)의 '시장사회주의'와 유사

다. 변화의 방향성(Trend)

○ 현단계 북한의 변화는 체제유지를 전제로 개선을 추구하는 수준의 '개혁(reform)' 단계

※ 일반적으로 체제변화(System Change)라는 개념에는 '체제전환'(transition)과 '체제개혁'(reform)이 포함. 체제전환은 동구권과 같이 경제부문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치부문과 이데올로기 부문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, 체제개혁은 중국-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 기본틀이 유지되면서 주로 경제부문에서 부분적이고 완만한 속도로 정책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'위로부터의 개혁'(change within the system)을 의미

- 주로 경제분야에서의 개혁·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, 이는 사회·문화분야, 나아가 정치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-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체제전환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개혁·개방의 성과(速度와 深度)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.

○ 북한의 변화는 기존 정치이념과 체제의 범위내에서 경제·사회·외교·대남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리추구에 중점

- 경제분야는 북한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, 사회주의 원칙하에 시장경제요소 도입 확대
- 사회·문화분야에서도 시장경제요소 도입에 따른 자본주의문화 확산, 새로운 사회계층 등장 및 사회유동성의 증가
- 정치·군사분야에서는 '우리식 사회주의', '선군정치'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당·정 간부 세대교체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변화 추구
- 외교분야에서는 투자유치 및 경제적 지원 확보 등을 위해 실용주의적 대서방·비동맹 다변외교 전개
- 대남관계에서는 종래 대결적 자세를 지양하고 다방면의 교류협력에 적극 호응

※ 다만, '04년 하반기 조문문제, 탈북자 문제 등 체제와 관련된 신뢰문제 발생으로 당국간 대화 중단

- 이렇게 다양한 방식과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'결과가 아닌 과정'(진행형)으로 이해할 필요

※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현실 적응을 위한 실제적인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이분법적 평가보다는 단계론적 평가가 적절

북한의 변화단계 모델

1단계 : 「상징적 변화」(Symbolic Change)

- 부분적, 제한적 변화 시도 단계(지령형 계획경제) -

<특 징> △부분적·제한적인 정책수단 변화 시도 △변화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계 △변화 방향성(trend)에 대한 예측이 곤란



2단계 : 「의미있는 변화」(Significant Change)

- 변화의 범위 확대, 변화의 '방향성'(trend) 형성 단계(혼합형 계획경제) -

<특 징> △의사결정권의 분권화 △계획위주에서 시장기능 도입확대 △변화의 흐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(irreversible) 상태



3단계 : 「근본적 변화」(Fundamental Change)

- 개혁·개방의 전면화·제도화 단계(시장주도 경제) -

<특 징> △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(현 중국 또는 베트남)
△동구권 초기 체제전환 상태와 유사

2. 분야별 변화동향

가. 경제분야

□ 시장기능의 공식적 활용·강화

- '03.3 김정일의 지시로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, 시장을 상업유통의 한 축으로 육성
 - '03.3월부터 평양시(40개)를 비롯, 북한 전역에 대규모 「종합시장」을 300여개 조성 추진('04.12까지 83개 설치)
 - ※ 매대의 95%를 개인에게, 5%는 국영 공장·기업소에 배정. 국영기업소에서 생산한 소비품 30% 한도내에서 판매 허용
 - ※ “종합시장의 운영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심도와 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변”(‘03.12.22, 조선신보)
 - 외국과의 합작 등을 통한 쇼핑센터 등 유통시설·기반 확대
 - ※ 중국의 평양제일백화점 임차, 북중상품판매센터 개설, 영국과 합작사업으로 ‘중구시장’(평양시 중구역) 건립
- 그동안 기피해왔던 「경제개혁」, 「시장」 등의 용어를 공식 사용,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교과내용을 새로 개편
 - ※ “우리는 여러 기회에 걸쳐 「경제개혁」을 추진하여 올해에도 종합적 소비품 시장 확대 등 실천적 조치를 실시하였음.”(‘03.6.10, 조선중앙통신 논평)
 - ※ “오늘의 현실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안되며, 시장도 상품유통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임”(‘03.4.1, 조선신보, 최흥규 국가계획위원회 국장)
- 매대·점포(일부 개인은 일반상점을 기관·기업소 명의로 차용하여 임차) 증가, 개인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등 상업유통부문 활동 활발

- 24시간 편의점, 인터넷 상거래('내나라' 사이트 등) 등 새로운 유통망 등장
-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공존하며, 국정가격 결정시 수요·공급, 국제시세, 생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- 종전에는 국가보조금 지급으로 실제 원가보다 낮게 계상된 생산원가만을 고려
 - 종합시장에서는 쌀, 기름 등 중요상품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나, 사실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
 - ※ "백화점 등 국영상점에서는 나라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고 있으며, 국정가격도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비율에 맞게 조절하고 있음."('04.3.27, 조선신보)
 - 인플레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화 조치로 '04.4부터 '식량판매소' 및 '도매반'을 설치·운영
- 광고, 쇼윈도, 간판, 상표권의 중요성 강조 등 상품마케팅에 관심
 - 평양 시내 및 공항·역·고속도로 등에 평화자동차("휘파람") 대형 광고판 설치(8개), 평양과 지방에 상품진열창(쇼윈도) 및 상업간판 등장

□ 자율 확대와 실리 중심으로 경제운영방식 전환

- 농촌관리방식의 변화로 농업생산량 증대 도모
 - △토지사용료 및 농자재 사용료 징수 △협동농장의 자율처분권 확대 (수확량의 20%→40%) △생산·분배단위를 작업반에서 분조로 전환 (100여명→10여명) △현금에 의한 실적분배 확대
 - △개인 경작지 허용면적을 30~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 △가족영농제·포전담당제 시범실시 등 토지임대제의 점진적 확대

※ 가족영농제 및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 농지를 분조(2~5가구)에 할당경작케 하고, 수확량의 30%를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임의 처분 허용, '05년부터 전국 확대 예정

○ 공장·기업소의 경영자율권 확대

- 지령성 계획지표의 축소, 지방, 공장·기업소, 농장 등 하부단위의 자율성 강화

※ 공장기업소에 금액상 목표만 제시, 계획초과생산물 처분 허용, 합의가격에 의한 기업간 물자거래 허용, 자체 구조조정권 부여('04.12.11, 조선신보)

- 지배인에게 20% 범위내에서 인원운영 자율권 부여 및 재료구입 권한 부여

※ 「대안의 사업체제」 등 사상중심의 생산력 강화방식 약화

○ 기업의 경영방식과 분배방식을 수익 중심으로 전환

- △채투자, 근로자 복지, 성과급 등에 사용되는 기업이익 유보분의 확대, △계획외 생산·판매 허용 등

※ 기간산업부문은 국가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, 농업·경공업·상업 유통 등 민생부문은 시장지향적 운영체제로 전환중

-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면서 △'변수입(이윤+임금)'을 기준으로 한 실적평가 △임금상한선 폐지 및 차등지급 △유휴노동력 유상동원제 실시

※ '02년부터 변수입의 분배체제에 맞추기 위해 주요 예산수입항목인 국가기업 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을 합쳐 「국가기업이득금」으로 개정

- 공장·기업소들은 과거와 달리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,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품질제고 도모

※ 개정 형법에 상품의 품질을 강조한 조문 신설

○ 생산부문 개혁을 위한 여건 조성 추진

- △회계법 제정('03.3) △전면적인 기업재무조사 △기업소 지배인의 30~40대로 세대교체 △산업현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인정 등

- ※ 북한은 올해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후 열린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(3.26)에서 각급 공장기업소의 새로운 회계법 적극 수용을 촉구

- ※ '05년까지 전면적인 지배인 세대교체 추진(대안중기계 지배인 김덕훈 43세, 천리마제강 지배인 김형남 41세, 대흥청년광산 지배인 황영삼 34세 등)

- ※ 지적제품 유통의 계약당사자로 예외적인 경우 개인도 가능('04.1.21), 지적재산자에게 3년시한으로 이윤의 30%를 배당('04.8.29, 조선신보)

○ 경제난으로 부족해진 재정의 확충을 위해 공채판매 및 초보적인 세금 징수 실시

- 주민들의 여유화폐자금 동원 및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공채판매('03.5-11)

- △종합시장 판매자로부터 국가납부금(판매수익의 25%: 일종의 소득세) 및 시장사용료(상품종류에 따라 하루 50~300원) 징수, △국가건물 임차 개인사업자로부터 국가납부금 징수, △텃밭 등 계획외 농지에서 세금 징수(평당 12원)

○ 기업운영자금을 재정이 아닌 은행대출로 조달하기 위한 재정·금융부문 개혁을 준비

- 조선중앙은행 관계자 중국 4대국영은행 금융연수('02.8), 사회과학원 관계자 중국 금융연수('03.8), 베트남 국제금융연수('04.5) 등 실시

□ 대외 경제개방 추진 및 외화획득 노력

○ 외자유치를 위해 「경제특구」 지정 및 대외개방 확대 모색

- 신의주특별행정구역('02.9), 금강산관광지구('02.10), 개성공업지구('02.11) 등 경제특구 지정 및 남포 등 연해도시 개방 움직임
 - ※ 신의주특구는 중국의 반대 등으로 '04.6 사실상 중단. 남포직할시를 폐지, 구역을 축소하여 특급시 지정('04.1)
- 경제특구와 관련된 하위규정 제정·발표, 4대 경제협합의서 발효 등 경제협약의 제도적 기반 마련
 - ※ 개성공업지구 하위규정 11개, 금강산관광지구 하위규정 9개 제정 등
- 평양 국제비즈니스 단지 건립, 평양 제일백화점 임대 추진 등 중국과의 경제협약 확대
 - ※ 중국 복건성 투자시찰단 방북('04.9-11월), 사천성 투자시찰단('04.11) 방북 등
- 기 지정된 나선특구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 경제협력합의서 체결('04.1), 나선지역에 관세면세지역 제공 협의('04.10)
 - ※ 남·북·러 철도전문가 회의('04.4) 및 북·러 국경철도위원회('04.7)를 통해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논의
- 해외 시장경제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 개방 준비
 - 중국·베트남·호주·동남아·유럽 등에 경제대표단 파견 및 시장경제연수 지속 확대 실시
 - ※ 경제대표단 '01년 68건(32개국) → '02년 131건(37개국) → '03년 138건(135개국), 경제연수생 '01년 186명 → '02년 227명 → '03년 237명
 - ※ '04년들어 경제대표단 리비아 방문(2월),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체코·영국 방문(3월), 무역성 대표단 말레이시아·태국 방문(6월),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 스위스 방문(9-10월) 등 EU 및 아시아·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경제대표단 파견
 - ※ 합작경제특구 관련 베트남 경험 습득에 집중('04.5, 소창식 외무성 구주국 부국장)

- 합병·합작 외 단독기업설립 허용, 최저임금 인하(30유로), 전기세·물세 등 각종 사용료 및 세금 인하로 외국인 기업 투자여건 개선

○ 부족한 외화획득을 위해 「외화교환소」 설치 및 무역확대 도모

-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화교환소를 설치, 암시장 환율인 1\$당 1,700~2,000원 수준에서 외화 교환 실시

- 개별 공장·기업소와 시·군 단위의 무역을 허용하고, 외화별이 기업의 외화 자체활용 비율을 20%에서 40%로 확대

※ 공장·기업소에 수출물량의 3배까지 수입물량을 늘릴 수 있는 권한 부여

○ 개성공단·금강산 특구 및 외국인회사에게 북한노동자와 개별 근로계약 체결 및 직접 임금(외화) 지불 허용

※ 경수로사업의 경우 개별 노동자에 대한 직접 작업지시 및 임금지불 불허

□ IT·이동통신사업 육성 및 응용기술 중시

○ 김정일의 중국 방문('00년·'01년)을 계기로 IT산업 육성 강화

- IT산업을 통한 '단번도약'을 역설하는 가운데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H/W보다 S/W 개발에 주력, 수출로 외화조달

※ 인공지능 세계컴퓨터바둑대회 우승('04.10.28, 중방), 문자인식·언어인식 프로그램('04.10.12, 조선신보) 등 640여건의 S/W 개발

- 공장·기업소의 자동화사업 및 인민경제 정보화 사업 중점 추진

※ 최근 1년간 평양에 첨단기술봉사소(공장의 HW, SW 기술지원 등) 및 6~7개의 PC방을 개설하여 성황리 운영(11.17, 흑룡강신문)

○ 통신부문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실리중심의 사업으로 전환

- 경제정보체계로 활용하는 한편,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을 위해 방화벽 개발 등을 추진

※ 현재 외부로 연결된 인터넷은 외무성 등 특수기관 및 일부 기업소에 한정

- '02년도 전국 시·군까지 연결한 광케이블·컴퓨터통신망을 농촌의 리까지 구축 추진

- '02.11 평양·나선에서 휴대전화 개통이래 각도 소재지에 이동통신망 개통, '03년 평양·나선 등에 이동통신기지국 50여개 건설

※ 휴대전화 시스템은 태극 특슬리사가 구축(용량은 3만회선), 북한은 '03.11 휴대전화기가 2만대를 돌파했다고 선전한 바('03.12.4, 조선신보) 있으나, 금년 5월들어 휴대전화서비스 중단 조치

○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 「경제와 과학의 일체화」 중점 추진

- 지적제품 유통 제도화, 「2.17과학자·기술자돌격대」의 생산현장 파견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주력

※ 공장기업소는 수익금의 5%를 '과학발전기금'으로 재투자('04.10.1, 조선신보)

나. 사회·문화분야

□ 자본주의적 사고 확산

○ 실리 중시의 사회분위기로 주민들의 시장친화적 마인드 형성

- 주민들이 '돈의 가치'를 인식, '에누리', '깎아주다', '떨이'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거래 흥정

- 상업 광고판 설치, 자본주의식 혁신 구호의 공장내부 전시, 식당 상호를 적은 라이터 선물, 상점 점원들의 호객행위

○ 시장경제요소가 도입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자본주의적 사고 확산

- 임금 상한폐지·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화폐중시 가치관이 심화되고, 근무태도가 능동적·적극적으로 변화
 - ※ 봉사직종(식당, 카페, 가라오케, 당구장 등)에서는 고객만 있으면 영업시간을 새벽까지 연장(평양체육관 앞 불고기식당은 24시간 영업)
- 개인 상업활동·사채업·주택매매 등 상거래 성행
 - ※ 작년초부터 평양에서 고급아파트 건설 및 매매가 성행, '03.8 인민무력부가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설명회도 개최
- 당구·볼링·컴퓨터게임·햄버거(고기접빵) 등 외래문화 유행
 - ※ 김일성종합대 등 평양 시내 각 대학에서 햄버거 공급('03.12.6, 노동신문), 평양체육관 앞 24시간 햄버거가게에서 세트메뉴 판매('03.10.19, 조선신보)
- 주민들은 중앙배급제가 중단 또는 축소되자 생필품을 시장구매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변화된 현실에 점차 적응
 - ※ 음년 3월부터는 정부기관, 무역회사, 중요기업소에 대한 식량배급제 폐지,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직장에 납부하고 허락을 받은 후 장사를 하는 직장인 증가('04.11, 북한이탈주민)

□ 대남 동경심 대두

- 남북주민간 접촉증가, 교류의 질적변화,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에 따라 대남 적개심 완화 및 동경심 대두
 - 남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및 남한제품 선호경향 증대 등 「南風」 확산
 - ※ 「돌아와요 부산항에」, 「사랑의 미로」 등 남한노래 인기, 「가을동화」, 「저울연가」 등 남한 드라마테이프 및 영화테이프가 부유층, 무역업자 중심으로 확산
 - ※ 장마당에서 과거엔 남한제품 상표를 떼고 팔았으나, '03년 중반 이후 남한 상표가 있어야 진품으로 인식, 더 잘 팔리는 추세(한국의류신발 등 인기)

- 남한의 물품지원에 따라 '대한민국 쌀' 포대, '대한적십자사'의 비료 포대, 남한에서 생산된 음료수 페트병 등이 유용하게 재사용

□ 새로운 사회계층 등장 및 사회유동성 증가

○ 자영업 성행으로 새로운 사회계층 등장

- 국가 건물을 기관·기업소 명의로 임대해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·상점이 증가
- 직업, 배우자, 대학·학과 선택도 경제적 능력 중시

○ 상거래 활성화로 인구이동이 증가

- '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계기로 인구이동이 활발해졌으며, 최근에는 장마당 등 시장 활성화로 인구유동성이 더욱 증가

※ '98 헌법 개정시 '거주이전·여행의 자유'를 명문화

○ 대외개방, 물자 및 인구 이동 증가 등으로 외부 접촉 및 정보 유입 확대

※ 외부와의 정보소통 차단을 위해 '04.5부터 휴대폰 서비스 중단

□ 빈부격차, 부정부패 등 사회문제 발생

○ 빈부격차 발생 및 생활고로 인한 불만 급증

- 장사꾼 등 신흥부유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반면,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장의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고 악화

○ 부정부패, 범죄 등 일탈행위 증가

- 당·정·군 간부들의 부정부패 및 지대추구행위(rent-seeking), 신흥부유층의 생필품 매점매석, 군인들의 민간 피해 행위 확산

※ 중고차 밀거래, 공장설비부품 밀매, 인민무력부 산하 부대차량의 약 70%가 영리활동 추정('03.6. 북한이탈주민)

- 배금주의 팽배로 뇌물수수, 절도사건 등 증가

□ 사상교양 강화 및 주민불만 해소방지 시책 병행

○ 자본주의·개인주의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통제 및 사상교육 강화

- '02.7 김정일 지시로 '황색바람 차단운동'을 전개, '04 상반기 평양 시민증과 공민증 교체, 새 여권 발급

※ 주민통제조직인 인민반 구성(40여세대), '02년부터 경비실을 신설하여 감시 강화, 탈북자 관리용 '행불자 명단' 책자 제작

- '03년 개성·해주·원산·사리원·신의주, '04년 청진·강계 등 주요 접경도시에 '계급교양관'을 설치, 주민집단교육을 실시(연2회이상)

※ 세관 등 국경 연선지대 검열일꾼들은 이색적인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급성 원칙을 강하게 세워 근무할 것을 지시(북한내부자료)

- 개인주의를 사악한 것으로 매도하고 전쟁영웅을 이상형으로 내세우는 집단주의적 사상 교양 강화

※ "인간의 뇌와 육체를 빼앗고 사회에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는 독소인 미신과 황금만능주의, 부르조아 생활양식을 유포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됨"('04.8.5. 평방)

○ 사회주의 경제질서와 집단주의문화 유지를 위한 형법규정을 대폭 신설·개정('04.4)

- 사유재산침해처벌강화, 상품판매·가격질서위반죄, 탈세죄, 외화관리 질서위반, 불법주택 거래죄 등 경제관리질서 처벌조문을 기존 18개조에서 74개조로 확대

- 퇴폐적인 문화반입 및 행위, 허위날조 유포, 매음 등 자본주의 병리 현상 유입차단과 비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처벌 강화(16개조에서 46개조로 확대)
- 주민들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대체식량공급 및 24시간 편의점·생맥주·대중식당 운영확대
 - 오리·염소·메기·뱀장어 등을 집중 사육, 평양시내에서 「대동강 맥주」 판매, 식당·청량음료점·국수공장 등 사회급양망 확대
 - ※ 평양엔 생맥주집 150개, 대중식당 350개가 성업중이며 지난 4월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24시간 편의점 및 식당 개업('04.4-5 조국5월호, 러시아소리방송)
-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생활을 장려하면서 인민 취향의 대중적 문화 확산
 - 함남 흥남시에 종합편의시설 「천기원」(연건평 수천㎡)을 개원('04.4) 하고 목욕탕·식당·오락실 등을 운영
 - 평양시 지하철 광복역 인근에 북한이 자체개발한 PC방(PC100대) 개설('04.4)
 - ※ 평양시 수업을 마친 대학생들이 오후에 몰려와 PC 사용에 몰두하는 바람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('04.11, 조선신보)
 - 오락성·대중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주민취향의 대중문화가 TV 중심으로 확산

다. 정치·군사·외교분야

□ 실리사회주의 강조

-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'실리사회주의' 이론화 시도
 - 실리사회주의를 "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시행하는 것"으로 정의(「경제연구」, '03년 1호)

※ “사회주의 원칙과 실리의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완성”(’03.9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, 박봉주 총리 선서)

- 김정일의 실리중시 교시 때문에 자기분야 최고가 되면 그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형성

※ “모든 당간부들에게 국가에 이득을 주는 참된 실력가가 될 것을 촉구”(’04.8.21, 노동신문)

- 미래지향적인 ‘경제강국 건설’, 정보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중점 육성 등 이념적 구호보다 각 분야에서 실리 강조

※ “우리는 경제사업에서 실리주의로 나가야 합니다. 정치와 외교에서도 실리가 중요하지만 경제사업에서는 실제적인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”(김정일)

□ 세대교체 및 실무 중심의 테크노크라트 중용

- 당 정치국·비서국 등 권력핵심 인물의 큰 변화는 없으나, 국방위원회의 경우, 혁명1세대를 신진인물로 교체(백세봉)

- 제11기 제1차회의(’03.9)에서 혁명 1세대인 고령 및 지병인물 퇴진

※ 이을설(83), 백학림(86), 김철만(86), 최영림(75, 지병) 등

-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시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하면서 실무중심의 테크노크라트 중용

- 내각 총리, 부총리(로두철, 전승훈) 모두 경제분야 인물 기용, 교체내각相 5명중 4명이 경제분야 전문가

※ 박봉주, 박남기, 김광린 등은 경제시찰단 일원으로 ’02.10 방한

- 당 및 내각에서 40-50대, 전문성·사고 유연성·실무경험을 겸비한 젊은 인물들을 주요 직위에 등용

※ “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젊은 일꾼들을 많이 양성하고 사고방식·업무자세에서 낡은 관념을 탈피, 혁신을 이룩할 것”(’00.7, 김정일 지시)

※ 능력이 있으면 서열에 관계없이 발탁, 내각의 상부상 등이 40대가 많아지고 있음.
(’04.5, 국토환경보호성 부상)

- 주요 회담대표단을 남북회담 3세대로 교체(권호웅, 전종수, 김만길 등)
- 최근 교체된 인민군 군단장들 대부분은 40-50대, 사단·여단장들도 30-40대로 대폭 교체

□ 교류협력 및 경제건설에서 군부의 지원 증가

○ 남북교류협력 관련, 군부의 태도 변화

※ “끊어진 저레의 혈맥을 다시 잇고 통일로 나가려는 온 민족의 즐기찬 흐름을 가로막을 수 없음. 우리는 6.15 남북공동선언 아래 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갈 것임” (’03.4.25, 인민군 창건 71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)

※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(6.3-4)에서 채택한 서해해상 우발충돌 방지와 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합의서를 “6.15 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데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것”으로 평가
(’04.6.13, 중방)

○ 철도·도로 연결 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「군사적 보장 합의서」 채택 및 군 당국자간 실질적 협력 증대

- 비무장지대 일부 구간에 대한 개방, 지뢰 제거, 군사직통전화(경의선: ’02.9, 동해선: ’03.12), 통행안전보장 합의 등

※ 남북정상회담 이후 ’04년 8월말 현재까지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회담 총 31회 (금년들어 두 번에 걸친 장성급군사회담 등 총 7회의 군사회담 개최)

※ “우리 군대는 6.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으며, 쌍방 군부가 보충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전망이 열렸음” (’03.9.18, 중방)

○ 경제건설에서도 군의 역할을 강조, 주요 경제건설 사업에 군을 대대적으로 동원

- 선군정치는 군부의 역할을 국가방어 차원 이상으로 확대시켜 군을 개혁과정에 동참시키는 명분을 제공
- 물길공사·대규모 수력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, 식량난 타개를 위한 각종 농목장·기초식품공장 건설 및 농촌지원사업
- 최근에는 평양시 거리정비, 평양깡공장·대동강맥주공장 건설, 유원지 조성 등 상업유통·관광 및 경공업 부문에도 투입

□ 실리추구를 위한 외교의 다변화

- 김정일이 중·러·일 등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는 등 대외 폐쇄 이미지 완화
 - 김일성 사망('94.7) 이후 은둔상태에서 「남북정상회담」을 계기로 중·러국가 등 1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
 - ※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스스로 '은둔'에서 해방을 언급
 - 정상외교 대상국이 중·러 뿐만 아니라 일·EU·아시아 지역국가 등으로 확대
 - ※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우회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
 - 외교인사 접견 빈도가 '98-'99년에는 년2회에 불과하였으나, '02년부터는 년10-30회로 증가
- '98-'99년간에는 2개국에 불과하던 서방권과의 수교가 '00년 이후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21개국으로 확대
 - EU 25개 회원국중 23개국과 관계 정상화 (프랑스·에스토니아 제외), '02년 경제사절단 파견,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개설('03.4), 평양 주재 체코 대사관 재개설('04.5) 등 북·EU간 관계개선 노력 집중

- UN기구, 영국·독일 등의 북한주재 대사관 및 사무소에 독자 위성 통신 설치·운영 허용

○ 국제사회 참여로 부정적 이미지 불식 노력

- 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(김완수 중앙은행 총재, 6.26-28), 아세안지역 안보포럼(백남순 외무상, 7.1-2), 제59차 UN총회(최수현 외무부상, 9.27-10.5) 참가
- WIPO 부의장국·WHO 집행이사국으로 진출('00.5)하는 등 국제기구 및 협약 가입이 증대('98-'99년 1건→'00-'03년 8건)
- 협정체결에 있어서도 대외 교류확대에 따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년 평균 체결건수가 증대('98-'99년 31건→'00-'03년 55건)

○ '80년대 이후 둔화된 비동맹국가와의 우호증진 노력 재개

- 김영남 제13차 비동맹회의 참석('03.2), 양형섭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4개국 순방('04.2), 김영일 몽골 등 아시아 5개국 순방('04.7), 김영춘 쿠바 방문('04.11) 등

3. 평가 및 전망

-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·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, 실리·실력·실적(三實主義)이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
 - ※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6돌 기념 중앙보고회('03.10.7)에서 최태복(최고 인민회의 의장)은 '경제면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實利를 중시하고 實力과 實績으로 당을 받들 것(3實)'을 촉구
- 경제적으로 부족한 물자 공급·유통 확대를 위한 시장기능 강화, 인센티브제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·확산되고 있는 단계
 - ※ 식량과 생산재는 여전히 계획이 주도하고 있지만, 소비재와 서비스업은 시장이 주도하는 단계
- 사회문화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시장경제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
- 한편, 배금주의·개인주의 팽배, 빈부격차·부정부패 증가, 외부 정보 확산 등 사회문제 발생으로 체제침식 우려 제기
 - 이에 따라 주민통제 및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한편, 사회문화시책을 확대함으로써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불만 해소에 주력
- 정치·사상적 측면에서는 당·정간부의 세대교체 추진 및 실무 중심의 경제분야 인사기용, 실리사회주의 개념 도입 등 체제내적·미시적 변화 움직임
 - 다만, 우리식 사회주의·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한편, 정치적 민주화·다원화, 이데올로기 등 본질적(fundamental) 변화 징후는 미약

- 핵문제 해결 등 대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외부 자본·기술 도입이 여의치 않은 만큼 향후 개혁·개방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

- 개혁·개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선결조건

- 현재 북한의 변화는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, 3단계 변화의 틀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「상징적(symbolic) 변화」 단계를 넘어 「의미있는(significant) 변화」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

- 물가상승, 재정적자 증가, 사상해이 등 문제점 때문에 개혁·개방의 수위(속도와 범위)를 일시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은 있으나, 변화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※ 중국·베트남의 경우, 물가상승 및 부정부패 확산 등으로 개혁과정이 일시 후퇴하였으나 각각 남순강화('92년), 도이모이('86년)를 통해 개혁 본격화

- 따라서, 북한의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양적·질적으로 확대·심화되고 제도화 과정을 겪으면서, 변화의 不可逆的 특성에 따라 궁극적으로 전 분야의 「근본적인(fundamental) 변화」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

※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체제생존을 위한 북한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우리의 일관된 대북화해협력정책(대북포용정책→평화번영정책)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 <<끝>>

